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 설명자료</b>	
	배포일시	2020. 11. 17(화) / 총2매(본문2)
<b>담당 부서</b> 자동차운영보협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	<b>담당자</b>	·과장 이증기, 주무관 이정록 ·☎ (044) 201-3855, 3861
	<b>담당자</b>	·처장 박기환, 차장 김성욱 ·☎ (054) 459-7502, 7501
<b>보도일시</b>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## 차량정보 수백만건이 유출되었으나 국토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MBC 뉴스데스크, '20.11.16.) >

- ◆ “차량정보” 수백만 건 유출, 국토부는 책임 떠넘기기
  -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뚫려 수백만 대의 정보유출
  - 차량 이력조회를 위해 정비와 판매소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접속 허용
  - 국토부와 공단은 접속자 추적에 필요한 IP 주소를 보관해야했으나,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민간 조합에 떠넘기고 있음

□ 정비업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\*(VMIS)과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비이력 정보를 전송토록 의무화('13.9,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) 됨에 따라,

\* 자동차의 제원, 등록, 검사, 정비이력 등을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('08년~)

○ 정비이력 전송 시 차량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정비업체가 VMIS에서 '차대번호(차량의 고유번호)'를 조회토록 되어있습니다.

○ VMIS에서 정비업체에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정보 중 차대번호와 차명으로 제한됩니다.

□ 국토부는 '18년초 일부 정비업체의 차대번호 조회수가 평소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, '18년 5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.

○ 그리고, '18년 11월부터 정비업체의 차대번호 조회 가능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.

○ 경찰 수사결과('20.8), 정비연합회의 위탁전산업체가 부품업체에 정비업체용 전산프로그램을 판매하여, 해당 부품업체가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, 경찰에서는 해당 전산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.

\* 부품업체 13곳에서 '17.11~'20.6월 차대번호 4,285건 무단조회

□ VMIS는 정부, 지자체, 공공·민간기관 등 100개 이상의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 차량번호, 차대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, 각 기관별로 전산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접속기록(IP)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.

○ 금번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VMIS에서 차대번호를 조회할 경우, 관련 정비연합회로부터 정비업체별 접속기록(IP), 컴퓨터 고유번호(MAC)를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.

○ 현재, 접속기록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중에 있으며, 앞으로도 VMIS에 대한 보안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